

2019.8

2019 FUTURE CONSENSUS DIALOGUE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미래 성과 보고서

- 일시 : 2019년7월 31일(수) ~ 8월 1일(목)
- 장소 : 국제문화회관(도쿄)
- 개최 :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자연에너지 재단



自然エネルギー財団
RENEWABLE ENERGY INSTITUTE

여시재

Future Consensus Institute

SSDP

Society of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Studies

발언자

한국

김부겸 국회의원
김영춘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병도 대통령 외교특별보좌관
권구훈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KGMLAB 대표
이종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사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광재 여시재 원장

일본

Ishiba Shigeru 중의원 의원
Eto Seishiro 중의원 의원
Hayashi Yoshimasa 참의원 의원
Yamaguchi Tsuyoshi 중의원 의원
Nagashima Akihisa 중의원 의원
Taira Masaaki 중의원 의원
Akimoto Masatoshi 중의원 의원
Matsukawa Rui 참의원 의원
Kitagami Keiro 전 중의원 의원
Maeda Tadashi 일본국제협력은행 총재
Akiyama Masahiro 일본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대표

Kawai Masahiro 환동해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겸 소장

Konno Yuri 다이얼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Ohno Teruyuki 자연에너지재단 상무이사

Ohbayashi Mika 자연에너지재단 사무국장

Okonogi Masao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Ijuin Atsushi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Nishino Junya 게이오대학 교수

미국

Frank Jannuzi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

Marc Knapper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Joseph P. Schmelzeis, Jr. 재일본 미국대사관 수석보좌관

요약

1. 자유로운 경제 질서, 더 큰 가치를 위해 양보하는 담대한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대화와 사안별 분리된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갈등 해소, 나아가 협력의 구체화를 추진해야 한다.

2. 여시재가 제안해온 동북아 협력구상인 나비 프로젝트를 통해 미싱 링크가 되어 있는 동북아의 협력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 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방이 가져올 이 지역의 도전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기술 협력,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3.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한일 관계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 한일 양국,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 없이 양국 간 합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자연에너지재단이 제안해 온 아시아 국제송전망은 자연 에너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협력 체제를 가능하게 한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아시아 전력 사용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이 기후변화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중일 3개국의 국제송전망을 연결하여 경제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 동북아 국제송전망구상인 ASG는 이미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SG 실현의 가장 큰 과제는 정책적 결단인데 이는 전력산업 구조 개혁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 두만강 개발계획(GTI)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협력의 심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미국을 포함한 다국간 협력을 통해 몽골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안정적 운송, 경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문제, 비핵화 이후의 북한을 ASG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 ASG 실현을 위해 동북아 국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5. 동북아 지역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다국간 협력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 개발의 주요 대상이 되는 동북아 지역 및 북방지역 국가들이 가진 정치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통가치의 창출, 협력의 과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북한과 동북3성, 극동러시아, 그리고 북극항로로 가는 관문이 될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 의미 있는 개발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이 필요하다.

6.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변수에 주목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 데이터 유통의 룰을 함께 만들거나 한일 공동 데이터센터 설립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전세계 암호화폐(암호자산) 1, 2, 3위인 미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
- 가상자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일 금융 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Opening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세션에서는 참가자들간에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한일간에 긴장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입장에 치우치기 보다는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발언도 있었다. 동북아 협력의 중심에 있는 한일 양국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가 요구된다. 첫째는 오다 노부나가 보여주었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개혁, 둘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차세계대전 중 1750통의 편지를 교환했던 루스벨트와 처칠처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다.

오프닝 세션의 발언자들은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인식차이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지적했다. 발언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양국의 상호 이해와 대화의 지속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재단법인 여시재가 추진해 온 나비 프로젝트, 그리고 자연에너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의 핵심적인 국가이다. 발언자들은 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방이 가져올 이 지역의 도전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기술 협력,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70여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기반이 되어왔던 한미일 3국의 연대와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3개국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인권에의 존중, 종교의 자유, 법에 의한 지배,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같은 공통 가치관에 의거한 것이었다.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미래’라는 이번 세미나의 타이틀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참가자들은 모두 공감하였다.

Session 1

나비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 협력

이 세션에서는 여시재가 제안해온 동북아 협력구상인 나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북극항로의 개방으로 일본의 서해안과 홋카이도를 지나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인류 최초로 북극 항로를 연결해서 아시아, 유럽이 연결되고, 아시아와 미국이 연결되는 인류역사상 새로운 밸류 체인이 최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비프로젝트 중심에 일본과 한국이 있다. 나비 프로젝트는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도시간 협력, 에너지 협력, 북한 문제의 공동제재, 공동 인센티브, 그리고 동북아 지도자간 대화를 제안해 왔다.

이러한 구상의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동북아만이 미싱 링크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변수에 주목한 협력 방안도 제시되었다. 향후 경제의 핵심 변수가 될 데이터 유통의 룰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비 프로젝트의 추진에도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일 공동의 데이터센터 설립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글로벌 인프라 개발 현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협력의 과제를 제안한 토론자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인 극동러시아, 동북3성, 그리고 향후 북한 등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간 개발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발협력의 구상은 중국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이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동북아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협력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한중일 3국이 모두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공통의 전략적 비전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 IPCC가 공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1.5°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세계 전기 사용량의 약 50% 정도를 자연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현재 세계에서 자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정도이다. 한국은 8%, 일본은 18%, 중국은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의 전력 사용량은 아시아 사용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의 노력이 기후변화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한중일 3개국의 국제송전망을 연결하여 경제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다양한 협력의 의제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협력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준비작업으로 향후 협력을 위한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Session 2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과제와 미래를 위한 제안

이번 세션은 한일관계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과 이해를 상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선 일본측 참가자들은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서플라이 체인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제공해 오던 특별한 대응을 중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양국 간 갈등의 발단에 있는 강제 징용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이후 진행된 일본의 중재 제안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일간의 전략적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국력 증대와 남북화해 무드,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에게 가지는 일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양국이 더이상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일본 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우선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한국 국민은 권력이 잘못하면 국민이 교체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지난 정권이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했다는 사실로 인해 정부는 사법권 판결에 대하여 더욱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형성되어온 기존의 한일 관계를 전복하려 한다는 일본 사회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8월 2일 각의 결정에 의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사회의 반일감정이 폭발할 수 있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 SK의 반도체 산업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동북아의 주요한 정치적 과제인 북한 문제 해결을 둘러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되 북미 국교 정상화, 북일 국교정상화를 비롯한 이 지역 관계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현안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관계 접근과정에

서 한국이 역할을 함으로써 양국간의 신뢰를 쌓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도 태평양의 평화 안정 질서의 유지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한미일 공조, 한일 양국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강대강’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우선 양국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을 보류하고 협의점을 모색하자는 냉각기를 가지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양국 갈등의 해결은 결국 한일 양국 지도자 간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과정에 국민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공통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도자의 의무라는 지적도 있었다. 수출규제(일본 측 표현으로는 수출관 리의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관리기구 혹은 협의체를 운영하여 투명한 관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 없이 양국 간 합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양국간의 합의가 국회 비준을 통과하는 것을 프로세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양국 간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각각의 논리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사태의 진전 여부에 관계 없이 지속적인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 하였다.

Session 3

에너지로 보는 동북아협력의 미래

동북아 협력의 구체적인 분야인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는 국제송전망 건설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국제송전망 구상이 부상하였다. 자연에너지 재단이 제안하는 아시아 수퍼 그리드(ASG)는 몽골의 풍부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중국, 한국, 일본까지 운송하는 구상이다. 이미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 발전 비용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보다 저렴해지고 있다. 경제성의 우위는 물론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송전 기술의 진화로 전력 유통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진보도 이루어졌다. 송전망 구축에 드는 비용 또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의지만이 남아있다.

과거 동북아 지역이 에너지 협력이 제로섬 상태에서 계속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에너지를 서로 필요로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ASG는 러시아 몽골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서로 전력을 수입, 수출하는 윈윈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미래산업이라는 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에너지 협력 필요성에 주목하는 발언도 있었다. 빅데이터 관리,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이 에너지 생산 관리와 맞물리면서 연관 산업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에너지 제로 빌딩 등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삶의 양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한일간의 협력의 구체적인 모델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의 추진 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동북아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계획(GTI)과 연계한 에너지 협력 방안도 제안되었다. 1991년에 UN이 런칭한 GTI는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정부간 협의체로 구

성되어 있다. GTI에서는 협력위원회의 하나로 2009년 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에너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이 여기에 참가하여 ASG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ASG의 타당성 검토가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진행하였고 이미 경제성과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남겨진 ASG 실현의 가장 큰 과제는 정책적 결단인데 이는 전력산업 구조 개혁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치가 정책을 간섭하며 전력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억제해 온 측면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전력시장 자유화는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정비와 국가간 제도 차이 등을 검토하고 참가국 모두에게 공평한 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ASG 실현은 향후 인류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화가 가져올 폭발적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적인 예로 전세계 에어컨이 2016년 기준으로 18억대였는데 2040년에는 56억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이 절실해 지고 있는 것이다. ASG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몽골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안정적 운송, 경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문제, 비핵화 이후의 북한을 ASG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 미국을 포함한 다국간 협력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거론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을 위한 집중 토론을 계속해 나갈 것에 동의했다. 아울러 ASG 실현을 위해 동북아 국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금의 조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Session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미래

일대일로와 인도 태평양 전략이 교차하는 유라시아에서 동북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으로 놓여있다. 동북3성, 극동 러시아에서 요구되는 인프라 투자 수요에 더하여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경우 발생할 인프라 수요를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인지는 동북아 협력의 주요한 의제이다. 토론자들은 동북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발의 주요 대상이 되는 동북아 지역 및 북방지역 국가들이 가진 정치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개발 사업이 단순 자원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통가치의 창출, 협력의 과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나비프로젝트의 측면에서는 북한과 동북3성, 극동러시아, 그리고 북극항로로 가는 관문이 될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 의미 있는 개발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과 글로벌 창업 특구인 후쿠오카, 기타 큐슈를 중심으로 한 도시간 협력 방안도 언급되었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금융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전세계 가상화폐(가상자산)의 1,2,3위는 미국(24.5), 일본(10%), 한국(6.5%)이다. 이 3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구상이 제기되었다. 핀테크를 이용한 한일 양국간의 경제 교류는 이미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금융 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양국 정부간에 활용하는 것이 양국 민간 기업 차원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연구도 제안되었다.

기존 프레임 안에서 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GTI의 협력체 중 하나인 GTI 수출입은행연합체에서는 두만강 지역의 개발을 위해 회원국의 수출입은행들의 정보교환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GTI에 참가하여 수출입은행연합체를 통해 동북아 개발협력의 논의를 구체화 시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Closing

이틀 간의 회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지막 세션은 진행되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렸던 여시재 포럼에서 한일협력을 위한 도쿄 세미나 개최 구상이 제안되었고 이번 회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비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안경의 두 렌즈와 같이 중심에 놓여져 있다.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와 같은 시기일수록 양국의 전문가, 정치인이 함께 하는 대화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와 함께 에너지, 금융 등 미래의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채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회의였다.

한일관계가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역사를 다시 한번 어둠의 터널에서 희망의 터널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Future Consensus Institute

www.yeosijae.org

Tel +82-70-4458-5288 / Fax +82-2-762-5300



自然エネルギー財団
RENEWABLE ENERGY INSTITUTE

<https://www.renewable-ei.org/>

Tel +81-3-6866-1020 / Fax +81-3-6866-1021

SSDP

Society of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Studies

<http://ssdpaki.la.coocan.jp/>

Tel +81-3-3721-0877/ Fax +81-3-3721-0988